



두엄누리회보 제28호

2005년9월26일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현 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비료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

지난 9월 9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대강당에서 농민신문사 주최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비료정책 방향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농림부 친환경농업과 정 황근 과장은 모두(冒頭) 설명에서 세계의 농업시장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친환경 농업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구조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친환경 안전 농산물 공급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차별화를 촉진하고 ▲자연 순환형 친환경 농업 단지의 광역화를 꾀하며 ▲퇴비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여 많은 농업인이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지원과 제도 계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였다. 특히 정부지원이 확대되는 퇴비 등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그 동안 담당 공무원마저도 혼선을 빚어온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의 명칭문제와 계속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퇴비의 공정 규격 등을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과 상의해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실천방안으로는

1.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지원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 확대 추진 (읍.면별 1개소)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1,000ha규모) 조성 지속 확대
-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확대

2. 친환경 농자재 지원 확대

-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7월 1일부로 폐지된 화학비료 보조와 상응한 수준으로 지원 - 91~95년까지 화학비료지원은 연평균 650억 지원)
- 천적 해충방제 사업 지원
- 친환경 농자재(키토산, 목초액 등) 영세울 적용 확대

3.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 보급

- 친환경 농업 연구사업단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 가축분뇨 자원화로 자연 순환농업 추진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대신할 수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05)
- 가축분뇨 자원화 자금 지원 확대와 양분 총량제 도입

4.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 친환경 농업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다양화 (전용 경매센터 운영 등)

부산물 및 유기질 비료 정책 방향은 양질의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조기 정착시키고 농업경영비도 절감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비료 사용감축과 ▲유통 및 비료산업의 합리화를 통해 비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적 비료 공급 확대 및 품질관리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실천 방안으로는 ▲(증산위주의)고농도 화학사용 → 저농도 환경 친화형으로 전환 ▲토양개량을 위한 석회, 규산질 비료 지원 확대 ▲토양 검증을 통한 적정 시비량 하향조정
퇴비의 품질관리 강화방안은 최근 퇴비 등 유기질 비료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보조사업 참여 업체는 농협이 별도 운용지침을 마련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농협의 품질관리 방안은

- 업체별 생산능력에 따른 능력제 실시 및 위탁생산 납품 제한
- 우수생산업체 지정제 시행으로 업체간 품질경쟁 유도
- 중점 품질관리 대상업체선정 별도 관리 (품질검사 적발, 생산능력 대비 과다납품, 폐기물 처리 경업업체 등)
- 원료수불부 기록 및 이물질 선별기 설치 의무 등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안 인 농촌진흥청 농업자원 과장은 정부의 비료 품질관리 방향에 대하여

음식물 찌꺼기 사용시 비닐, 뼈, 쇠조각 등 이물질 혼입 및 염분농도가 우려되며 지방이양위원회 요구로 품질검사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도 합동 단속 등 유통비료 단속 회수를 년4회에서 8회로 확대하고 신고 보상금도 현행 5~20만원에서 20~50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부정 불량비료 및 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조치는 즉각 행정 조치함은 물론 위반내용을 분기별로 전문지 등 언론기관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 퇴비의 원료지정 심사 및 사후관리는 지

정원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기 지정된 원료도 사후품질 확인을 통해 부적합할 경우 지정 취소시킬 예정이다.

▲ 제도개선 안으로는 비료생산업 등록시 원료와

- 제조원료 상이시 처벌 규정 신설 검토
- 비료 수입업 신고시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자료 제출 의무화
- 제조원료 이외의 물질, 무등록 비료 등 처분 기준 강화
- 비료 공정규격 분류체계 재정비 등을 실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상원 부산물비료협회장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에 지원이 확대되는데, 같은 분뇨를 전문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는 우리 업체에게는 지원이 전혀 없다. 가축분뇨의 처리가 처리뿐이 아닌 이용 면을 고려한다면 전문 업체에게 지원이 확대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현재 친환경자재를 인정하는 퇴비 기준이 없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농산물 인증단체에서 인증하는 것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 품질관리에서는 이미 폐기물로 분류된 아미노산 부산액을 석회고토 등에 혼합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불량 유기질 비료가 유통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사용원료가 바뀔 때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부자재인 톱밥은 수급 형태에 따라 분쇄왕겨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참고가 되어야 한다. ▲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보증표를 부착하면 벌크 판매를 허용하였는데 단속 시에는 벌크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이 없어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박 상욱 유기비료조합 이사장은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계획에 자체 퇴비 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간 공동퇴비 제조장 정책을 보아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존 업체를 활용해 달라.▲ 1급 그

린퇴비가 금액에 비해 보조금액이 적어 금액 관계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일반퇴비와 확실한 차별 지원을 해 달라.

▲지역별 보조금액의 차이가 너무 심해 소비자들에 혼선을 야기 시키고 수수료 또한 편차가 심하고 심지어 포대당 350원까지 받는 농협이 있다. ▲ 품질관리에 행정기관의 비료 단속시 사전 통보 후 단속을 실시하는 바람에 단속 업무에 신뢰성이 없다. 또한 단속용 비료를 따로 만들어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어 단속업무를 철저하게 해달라

▲또 퇴비 공정규격의 수분 규제에 관해 시행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담당 공무원부터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생산업 등록시는 50%미만의 제품으로 등록해 놓고 생산하다 보니 어렵고 돈이 안 남으니 수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엉터리 생산업체는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 보조사업에 명칭이 유기질비료로만 사용되어 퇴비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있을 정도로 혼돈이 심한 상태이다. 명칭통합을 하던지 반드시 퇴비 명칭도 함께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임 병교 농협중앙회 비료팀장은 현재 받고 있는 농협 수수료에 대하여 다른 농자재는 평균이 8%정도이고 화학비료도 현재 8%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작년 지역농협 자율에 맡겼더니 5.5%밖에 되지 않았다. 원가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수료 적정선을 조사한 결과는 12%로 보고된바 있다.

또 지역간 보조금액의 차이는 작년 농협을 통한 보조 사업을 보면 중앙정부 보조사업 60만톤(210억원)외에도 지방정부 보조사업 70억원과 농협자체 보조사업 70억원이 지원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지역간 보조금액 운용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금액이 틀린 이유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 외 화학비료 업계 쪽에서는 그간 애지중지 하며 정책의 지원을 받던 화학비료가 고

농도라는 이유 하나로 정책 지원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에 대해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왔으며, BB비료나 완효성비료는 친환경 자재이므로 보조품목에 넣어야 하고 3종 복합비료도 유기농이 30%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보조지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건의에 대해 정부 측의 답변은

- 유기질비료 보조지원 확대는 예산 배정과정에 동결이야기가 있었으나, 예정대로 확정되었고 전체적으로도 다른 부처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친환경 예산은 인상되었다.

- 수입 유기질비료의 문제는 농진청과 연계하여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검토하겠다.

-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민들 요구에 의해 입상화 제품을 늘려 공급할 예정이다.

- 비료등록업무는 현재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반대의견도 많았으나, 지방 분권화에 대비한 이양 위원회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있다.

- BB비료와 완효성비료 및 유기복합비료는 내부적으로는 보조지원을 검토하였으나, 내년 지원은 제외되었다. 하지만 정책은 필요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 친환경지구 조성에 지원되는 퇴비제조시설은 농가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업체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

- 중앙보조사업과 지방비보조사업의 통합지원관계는 검토해 보겠다.

- Codex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자재는 근본이 자국내 순환농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친환경육성법 개정 때 국내 실정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 비료명칭 통합은 관리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토론회 및 공청회 후 결정할 예정이다.

- 퇴비의 수분문제는 농진청에서 연구 검토 중이며, 이번에 비료 분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므로 그전까지 많은 의견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다. .

- 유기질비료의 OEM생산품에 대한 지원논란도 적합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

부산물 비료의 공정규격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부산물 비료의 공정규격은 함유해야 할 주성분이 있고(최소량 기준) 일정기준이상 함유해서는 안되는 유해성분(최대량 기준)이 있고 기타규격(최대치 기준)이 있다. 우선 함유해야 할 주성분이 유기물인데 최소치가 기준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것이된다. 물론 이치에 맞는 기준이다 하지만 농업에 필요한 유기물은 많던 적던(유기물대 질소비율도 마찬가지임) 퇴비화(숙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기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야한다. 유기물의 다, 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발효정도)의 유기물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기타규격으로 되어있는 수분의 규제는 최대치 기준으로 잘못생각하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수분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한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특별한 기술인양 자랑을 일삼는다. 설사 그렇게 남다른 기술이라 하여도 일반적인 생산공정보다 특별한 방법은 공정의 기준이나 표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정규격이라 함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의 일정한 치수나 모양 등의 표준을 만들어 지칭하는 글자 그대로 「생산공정규격」이어야 한다. 품질의 기본성질을 판가름하는 품질기준이거나 품질 등급 기준과는 전혀 다른 각도의 표준인 것이다. 업계전체의 의견 및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토론없이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및 몇몇 동조인사에 의해 만들어진 수분규제는 업계의 많은 생산기술 혼란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이 문제로 인해 퇴비생산업체들이 현재는 물론 수 십년간의 생산공정을 되돌아보아도 수분의 규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유기조합이사장 교체 후 두 생산자 단체가 같이 공식적으로 수분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

해놓고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수분규제의 당위성 여부에 직면해 매번 이론적 근거없이 수분=물 이라는 일반적 상식을 근거로 소비자를 위해서라는 공색한 변명만 하기 급급한 상황에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현재 개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일이다. 그런데 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두 단체 중 우리가 처음부터 수분규제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해 더 말할 것은 없고 처음부터 수분규제를 주장하고 끝까지 고수하던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이 올 초 공식적으로 수분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함으로 재론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재론되기 시작한 문제가 이번 농어민신문사가 주최한 관계부처와의 비료정책 간담회에서 신임 조합의 이사장이 조합원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다. 미루어 짐작컨대 수분규제를 제안한 단체가 유기조합이고 보면 수분규제가 생기게 된 연유도 이제야 잘 알 것만 같다. 수분규제에 관해서 처음 생산자 단체가 제안해서 제도화되었다고 답변하던 관계기관 및 학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전체의 의견을 재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론적 근거도 없이 탄생된 규정을 놓고 언제까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하루빨리 관계기관 및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가 모두 모여 공개토론을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 되었으면 좋겠다.

업계 소식

- ☆ “축분, 유기질비료로 재활용” 농림부, 차관보 직속 ‘자연순환농업 T/F팀’ 구성
 - ☆ 심포지엄 안내: 「친환경유기농업 조기 정착을 위한 농자재 개발 및 산업화」
- 일시: 2005년 10월 7일(금)10:30
장소: 단국대학교 3과학관 국제회의장
주최: 단국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
-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